

# -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관리·운영 사무 -

##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6481
----------	------

제출년월일 : 2022. 10.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

### 1. 제안이유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핵심역할을 수행할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관리·운영 사무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 추진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사무의 위탁)
-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제6조(사업 및 예산 지원)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사무 기준), 제5조(위탁사무 대상), 제11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 ○ 필요성

- 사례관리 및 실태조사를 통한 취약계층 근로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노동권익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역 근로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역량을 갖춘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급변하는 산업전환 과정의 노동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 대응 필요
- 민간위탁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 감안, '22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한시 추진중이나 보조사업의 특성상 인건비 및 운영비의 제약 등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위탁범위 :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

## ○ 위탁사무

- (정책연구) 지역 내 산업노동구조 및 노동환경 파악을 통한 취약계층 근로자 실태조사 및 정책토론회·세미나 등
- (법률지원) 취약계층 및 비조직 근로자 권리구조를 위한 각종 노무법률상담, 침해대응 가이드라인 개발, 상담사례집 발간
- (교육) 노동인권·법률·산업안전 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인식개선) 권리보호 캠페인,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등
- (기획협력) 모범사업장 발굴 및 노사상생프로그램 운영 등
- 그 밖에 대구광역시가 필요시 요청하는 업무 지원 등

## 라. 위탁시설 현황

○ 시설위치 : DTL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 2층(달서구 조암로 13)

○ 시설조성 : 2022. 3. ~ 6월 ※ '22. 7월 개소

○ 시설규모 : 약 53평(연면적 176.4㎡)

○ 주요시설 : 사무공간, 회의실, 상담실 등

○ 인원현황 : 5명(센터장 1, 팀장 1, 직원 3)

마. 민간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민간위탁금 700,000천원(시비 100%)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근거	
계	700,000		
인건비	280,000	· 센터장 및 직원 급여 등	280,000
센터 운영 및 관리	140,000	· 시설임차 및 유지관리	50,000
		· 공공요금 및 제세, 사무용품 구입 등	10,000
		· 홍보 및 기타운영	40,000
		· 업무용 기자재 대여 등	40,000
사업 운영	280,000	· 정책연구	80,000
		· 법률지원	80,000
		· 교육	50,000
		· 인식개선	40,000
		· 기획협력	30,000

\* 수탁기관 최종 선정 시 변경 가능

아. 향후계획

○ 수탁기관 선정(공모) 및 위탁계약 체결 : '22. 11. ~ 12월

○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운영 : '23. 1월 ~

###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붙임 1

나.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 붙임 2

**붙임 1****관련 법령****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사무 관련 전문기관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제도 개발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도 개발과 지원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기초자치단체(구군) 및 노동경영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및 예산 지원)** 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고충처리, 상담활동 지원 사업
2. 국내 및 국제사회의 선진적 노동현장 및 노사협력 문화 학습을 위한 지원 사업
3. 경영단체와 노동단체 간의 협력관계 유지 및 관계개선을 위한 활동 등의 지원 사업
4. 노사민정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5. 근로자의 문화 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6.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증진,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의 권리보호, 근로자 복리증진,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 유지·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사무 기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위탁사무 대상)**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환경 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체육·공원시설 등 시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11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시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의 민간위탁동의안을 따른다.

② 시장은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시의회 동의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붙임 2****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노동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안)**

노동복지 지원제도 진입 前 단계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노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공간인 「노동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임.

**I 추진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 근로복지시설로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 종합서비스 지원
  - \* 영세사업 근로자, 건설근로자, 이주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근로자

**II 추진목적 및 필요성**

-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약계층 고용 불안정 및 열악한 노동환경 심화
  - 사회 전반 디지털 전환 가속으로 서비스·운수 등 서비스업종 집중 심화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불안정 지속으로 취약계층 근로자 근로환경 악화
- 노동 권익보호를 위한 예방적 서비스에서 권리구제까지 통합 노동행정 서비스 추진 필요
  - ⇒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현안 조사연구 및 협업과제 발굴로 노동복지 지역편중 해소 및 노동복지 서비스 질 개선**

**III 추진방향**

- 근로복지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 종합서비스 지원
-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여건 등 실태파악, 법률상담 및 교육,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 지원 사업 등 프로그램 운영
- 노동복지 지역편중 해소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역별 지원센터 연차별 확대 설치(구·군 참여 유도)

## IV 설치 및 운영계획

### 1 노동자 권익지원센터 개요

- 역할 : 취약계층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상담·교육 등 종합서비스 지원
- 주요기능
  - 취약계층 근로자 실태조사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전략사업 발굴
  - 노동권익 법률상담 및 교육·홍보 등 논스톱 통합서비스 지원
  -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2 시설 조성

- 시설명칭 : 대구 노동자 권익지원센터
- 시설위치 : DTL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 2층(달서구 조암로 13)
- 시설규모 : 약 176.4㎡(약 53평 규모)/ 사무실·회의실·상담실 등 구비
- 설립목표 : '22. 6월 예정
- 소요예산 : 250백만원(시설임차 50, 시설조성 200)

### 3 운영방법 검토

- 운영방법 비교

구 분	민간위탁	市 직접 운영
장 점	· 민간 전문성 활용,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신속능동적 대응 가능 ·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공공 서비스 품질 제고	·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심적 역할 ·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정책개발 가능
단 점	· 수탁기관 선정 시 경쟁 과열 · 특정단체 근로자 중심 편향적 지원	· 행정절차 이행 등 신속대응기능 저하 · 노동 관련 전문경험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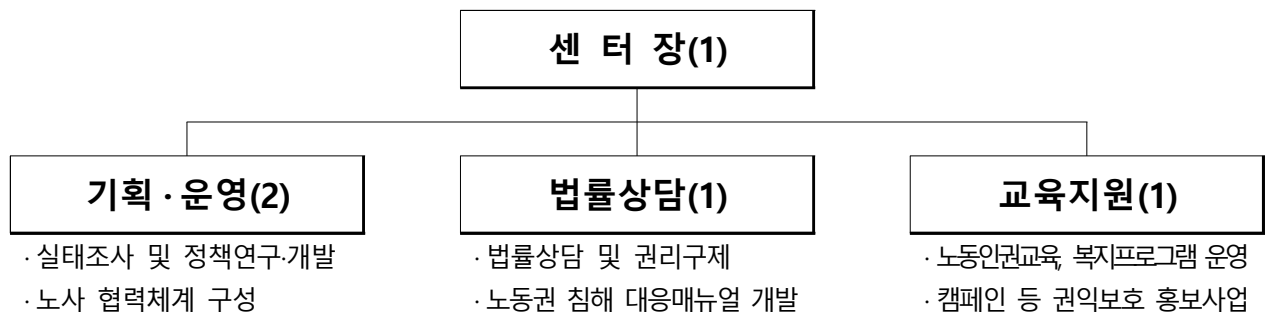


## ○ 검토의견 : 민간위탁

- 관련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신속·능동적 대응으로 실질적 근로복지 개선에 기여
- ※ 민간위탁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 감안 '22년 민간경상보조사업 한시적 추진

## 4 운영계획

- 운영시기 : '22. 6월 ~ \* '22년 한시적 민간경상보조사업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조직구성(안) : 3개 분야 5명 정도 \* 향후 민간위탁 추진 시 변동 가능



## 5 소요예산('22년 기준)

(단위 : 천원)

항 목	예산액	산 출 근 거	
계	900,000		
시설조성	250,000	○ 대구 노동자권익센터 시설조성	250,000
		- 내부 인테리어공사	200,000
		- 임차료	50,000
센터운영	650,000	○ 대구 노동자권익센터 운영 * 민간경상보조사업 기준	650,000
		- 인건비(담당자 급여 및 4대보험료 등)	200,000
		- 취약계층 근로자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토론회·세미나	100,000
		- 법률상담, 상담사례집·노동권 침해 대응 가이드라인 발간	100,000
		- 노동인권 교육,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70,000
		- 권리보호 캠페인 및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등	80,000
		- 근로자 보호 사업장 발굴협약, 노사상생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50,000
		- 기타운영비(홈페이지 제작, 사무용품 구입 등)	50,000

## V 세부 사업내용

### ○ 정책기획 및 운영

- 설문 및 심층면접, 전문가 자문 등 토대 근로환경 실태조사 시행
-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략사업 발굴
- 지역 내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 노사상생 거버넌스 구축·확산

### ○ 법률상담

- 소규모 사업장 등 근로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근로자를 위한 찾아가는 근로교육 및 법률상담
- 상담사례집·노동권 침해대응 가이드라인 발간 등 노동자 권리구제 서비스

### ○ 교육지원, 인식개선 및 홍보

- 노동인권 향상교육,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 운영
- 근로자 보호 모범 사업장 발굴·협약, 노사상생 지원프로그램 개발·운영
- 취약계층 근로자 밀집지역 등 대상 근로자 권익보호 캠페인 전개, 노동권익 서포터즈 구성·운영 등 대시민 관심 제고

## VI 향후 계획

○ 2022. 2월 : **시설** 시설장소 임차 및 설계 진행

○ 2022. 3월 : **운영** 운영예산 확보(제1회 추경)/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검토

○ 2022. 4월 : **시설** 공사입찰 및 착공

**운영** 조례 제정 및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심의·의결

○ 2022. 6월 : **시설** 공사 준공/ **운영** 수탁기관 선정(적격자심의위원회)

○ 2022. 7월 : **운영** 위탁계약 체결

○ 2023. 1월 : **운영** 인수·인계 및 관리·운영

참고 : 타시도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사례

## 참고

## 타시도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사례

구 분	인력	세부인원	운영주체	2022예산 (백만원)	면적 (㎡)	설립근거	운영방식	설치년도
서울	23명	센터장1, 팀장 4, 팀원 18 * 휴노동자쉼터 5개소 14명 별도	(사)한국비정규 노동센터	3,582	264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민간위탁	2015
부산	15명	센터장1, 팀장 4, 팀원 10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1,802	283.2 5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민간위탁	2020
인천	11명	센터장1, 팀장 3, 팀원 7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951	180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민간위탁	2022
대전	7명	센터장1, 팀장·팀원 6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730	230.7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조례	민간위탁	2015
울산 (노동 인권센 터)	5명	센터장1, 팀장·팀원 4	(재)울산일자리 재단	422	148.0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공공위탁	2020

## ※ 전국 노동권익센터 운영 현황

- 특·광역시(6) : 광주 제외 전 지역 설치·운영중
- 도(3) : 경기·충남·전남 설치·운영중(전북의 경우 설치 준비중)